

네이버쇼핑에도 칼 빼든 공정위... 제재맨 시장 지각변동

자사 서비스, 검색서 우대 혐의
입법조사처 “타업체와 차별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제재수위 따라 사업변화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어 쇼핑 사업에 대한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어 네이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네이버쇼핑의 사업 변화가 불가피해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자사의 쇼핑사이트 '네이버스토어팜'이나 온라인 결제수단 '네이버페이'를 쓰는 판매자의 제품을 눈에 더 잘 띄도록 검색창 상단에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는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임의로 특정 상품을 노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는 수위에 따라 ▲순수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 등이 거론된다. 결과에 따라 네이버가 이전처럼 특정업체



네이버에서 의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쇼핑 화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제품에 표시가 돼 있다.

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상황 속 네이버가 만약 다른 업체를 뚜렷하게 차별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령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네이버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2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만을 노출하는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쇼핑 서비스가 차별을 받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런 차별 행위가 현저한 수준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23조1항1호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

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런 차별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사업자로 하여금 네이버페이를 선택하게 만드는 강제적 효과로 작용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고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네이버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쇼핑·간편결제 서비스 등으로 전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편 공정위는 새로운 법령을 통해 네이버 쇼핑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띄우고 또 띄운 항공업계 “추석 대목 공쳐”

연휴·바캉스에 특수 기대했지만
국제선 대신 국내선서 ‘출혈경쟁’
여객수 줄었는데 운항편수 늘어

국내선의 확대로 ‘반짝 특수’를 노리던 항공업계가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면치 못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항공사들은 그간 쌓였던 적자 만회에 나선 바 있다. 올해 들어 확산한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대부분을 띄우지 못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5일에 달하는 장기간 연휴에 그간 여행을 가지 못했던 이들도 ‘추캉스’(추석+바캉스)를 계획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추석 연휴에 앞서 항공사들은 추캉스 수요를 잡기 위해 제주 노선 등 국내선 확대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부터 부산-제주 노선을 신규 취항해 매일 3편 이상



추석 연휴 이용객들로 붐비는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연합뉴스

운항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지난 8월 국제선 전용 항공기인 A321-200을 투입해, 김포-부산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또한,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잉윈도도 지난 8월 양양-대구 노선의 운항을 통해 항공 역사상 최초로 강원과 경북 하늘길을 이은 바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이번 추석(9월 30일~10월 2일) 기간 국

내선 부문의 시장 점유율(여객 수 기준)은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한 여객은 각각 65만4993명, 60만1668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국내선을 이용한 여객 수는 48만8304명으로, 전체 여객 50만7231명 중 약 9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여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동시에, 국제선 공급이 줄자

국내선 시장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항공사들에 국내선 시장에서의 점유율 중요성도 커졌다.

문제는 국제선을 운항하지 못하면서, 국내선 시장에서 ‘출혈경쟁’이 심화했다는 데 있다. 실제 이번 추석 기간 국내선의 총여객 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항공사들의 전체 운항 편수는 외려 늘었다. 항공사 내 좌석에 탑승객을 다 태우지 못한 채 운항한 경우가 지난해 대비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선의 총 운항 편수는 3558편이었던 반면, 올해는 3915편을 운항해 약 10%가량 늘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역시 ‘추석 특수’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정부가 이동 자제를 당부함에 따라 관광객 등으로 인해 제주 노선을 이용한 여객이 늘어난 모습이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추석 당일인 지난 1일까지 6일간 제주를 찾은 입도객 수는 20만2446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하루 평균 3만3700여 명꼴로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은 셈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韓경제 코로나 영향 내년말께 벗어날 것”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대한민국이 내년 하반기에서야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매우 완만한 ‘비대칭 U자형’ 회복 곡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일시적 안정 양상이 반복되면서다. 내수는 일정한 추세를 기준으로 작은 과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야 코로나19 이전 경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었지만,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을 확대해 이어지지 못하는 ‘역의 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 유동성이 실물경제를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막고 있지만, 자산 가격을 높여 금융 불균형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양극화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 양극화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단,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반도체와 가전제품 등 주력 품목 수출은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도 내비쳤다.

/김재용 기자 juk@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독려

한 달 간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간 중 방송과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과 혜택을 알려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한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자들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종고를 겪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데 홍보의 초점을 맞춰 계획이다.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50억 초과 고액증여 2년새 80% 급증

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최근 2년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파로 미성년자들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의 12만4876건보다 28.5% 늘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3조5282억원에서 5조3176억원으로 50.7% 급증했다.

2014년(3조4880억원), 2015년(3조3135억원)과 비교하면 2016년 이후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 게 뚜렷하다.

증여세 결정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액 증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나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한 증여세 결정세액은 1조165억원에서 1조6851억원으로 65.8% 늘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